발간번호
2013-03-02

2013년도
이슈페이퍼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박 상 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수의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전화 : (02)747-6887

팩스 : (02)3672-6887

홈페이지: http://www.chsc.or.kr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1)]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수의사)

1.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의 현실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수출 중심의 농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큰 농업기업에 정책자금이나 농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업정책이라기 보다 기업 육성 정책에 가까운 농어업 선진화 방안은 2011년 9월 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24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식품산업을 2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 :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73.3억 달러, 수입은 305억 달러였다.)

또한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량이 정체상태에 빠져 농업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 대안으로 IT-BT 융복합산업, 식물공장, 농업부문의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농림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어업 선진화방안의 본질은 농업이 아니라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일 뿐이다.

<표 1> 농가 호수, 농가 인구, 농림업 취업자 현황.

	단위	2011	2012(추정)
농가호수	천호	1,163	1,151
농가인구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천명 %	2,962 (33.7)	2,898 (34.7)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6.0	5.8
농림업 취업자	천명	1,542	1,497

자료 : 통계청

1) 이 글은 2013년 3월 1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그 뿐 아니라,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농업 분야의 규모화 정책도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업 정책의 핵심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규모화 정책이었다.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1986),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농어촌특별법(1990), 신농정 5개년 계획(1993) 등을 통해 "농산물 완전개방 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까지 15만 가구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농촌은 2001년까지 논 3~5헥타르를 경작하는 전업농 7만 가구와 5헥타르 이상을 경작하는 3만 가구의 쌀 전업농 10만 가구가 도시 근로자 상위 30% 소득계층의 가구당 평균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살고 있는 '텔레토비 동산'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논 3헥타르 이상 전업농은 3만 호였다. 더군다나 6헥타르 이상은 7000호, 10헥타르 이상은 1000호에 불과했다.

정부는 1998년 10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통해 1999~2004년까지 농업분야 투·융자 규모를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2004년 2월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농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규모화를 이루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2004~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여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텔레토비 동산'이 실현되지 않았다. 호당 경지면적은 논벼의 경우 1995년에 1.03ha에서 2011년에 1.14ha로 연평균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 호당 경지면적은 약 600평 이하로 영세하며 오히려 1995년에 비해 2011년에 호당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표 2> 국내 농업부문 생산액.

(단위 : 10억 원, 경상)

	2011	2012(추정)
농업	41,358	42,498
재배업	26,317	26,876
쌀	8,009	7,966
곡물류	1,455	1,391
채소류	8,534	9,384
과실류	3,675	3,744
특용·기타	4,645	4,391
축잠업	15,041	15,622
한·육우	3,053	3,435
양돈	4,545	4,901
육계	2,186	2,084
낙농	1,652	1,984
기타	3,606	3,21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물론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해 국내 농업부문 생산액은 42조 4천9백80억 원(<표 2>)으로 GDP의 2.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EU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WTO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과 EU 사이의 농업 보조금 감축 문제일 정도로 농업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일 뿐이다. 따라서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농업과 농민, 농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미FTA 발효 1년간의 한국 농업

FTA는 장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법, 제도, 관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 더군다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통계 수치로 FTA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칠레(2002), 싱가포르(2004),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200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2006), 인도(2008), 미국(2007 타결, 2010 재협상 타결), 유럽연합(EU) 27개국(2009), 페루(2010), 터키(2012), 콜롬비아(2012) 등 47개국과 10개의 FTA를 타결한 상황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 체결되어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협정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분석>(2012년 12월) 보고서가 최근 발간된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와의 FTA는 발효 이후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 분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한계 속에서 한미FTA 발효 1년간의 농업 및 위생검역 상황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1) 한미 FTA 발효 1년차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 감소

<표 3>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 금액.

	2011년		2012년		증감	
	중량(t)	금액(천$)	중량(t)	금액(천$)	중량(%)	금액(%)
농산물	10,280,314	5,245,485	7,967,868	4,330,170	-22.49	-17
축산물	515,249	1,686,050	410,779	1,410,637	-20.28	-16
임산물	868,041	619,367	1,592,675	792,394	83.48	27
수산물	54,168	155,262	55,178	177,387	1.86	14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한미FTA 발효 이후(2012년 3월 15일~12월 31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18.5% 감소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미 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축산업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FTA 발효 첫 해라 관세 인하 폭이 미미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등으로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① 미국산 쌀 수입 -69.3% 감소

<표 4> 한국의 쌀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36,426	75	168,827	-61.3
1	중국	230,490	69.3	70,644	-69.3
2	미국	125,429	60	47,703	-62
3	베트남	7,196	3,911,026.60	21,760	202.4
4	태국	60,752	94.2	20,539	-66.2
5	인디아(인도)	40	27.5	6,389	15,791.90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② 식량자급률

<표 5> 한국의 식량자급률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식량자급률(사료X)	53.4	52.7	51.6	51.8	56.2	54	44.5
곡물자급률(사료O)	29.4	27.7	27.2	27.8	29.6	26.7	22.6

출처 : 농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여전히 한국 소비자에게 신뢰회복 못해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총 소비량은 2011년과 비교할 때 15% 감소하여 46만8천 톤 가량 되었다. 그 중 국내산이 23만4천 톤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였으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수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이르렀다.

한미FTA협정에서 쇠고기의 농업세이프가드(ASG) 발동수준을 발효 1년차 27만 톤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물량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쇠고기 관세는 기존의 40%에서 발효 1년차에 37.3%로 줄어들었다. 아마 이 정도 관세 인하는 수입물량이나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34.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5.3% 낮아지므로, 갈수록 수입물량이나 소비자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다.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비중은 2008년 24%, 2009년 25%, 2010년 37%, 2011년 37%, 2012년 39.5%로 2003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은 2008년 58%, 2009년 59%, 2010년 50%, 2011년 49.5%, 2012년 48.9%로 예상을 깨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매년 3만 톤 정도가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멕시코산 쇠고기는 1~3천 톤의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수입이 개방된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해 2천58톤 수입되었다.

한편 2012년 한·육우 사육 두수는 306만 두로 2011년 295만 두보다 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한우(600kg 기준)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359만 원으로 2011년 보다 5.8% 하락하였다. 한·육우 사육 부문의 이러한 국내의 과잉 공급 상황은 국제 유가 및 사료값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맞물려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한·육우 사육 농가들은 번식보다는 비육을 선택하여 4~5개월 령 암송아지 가격이 2012년 96만 원(26.2% 하락)으로 떨어진 반면, 수송아지 가격은 2011년보다 150만 원(8.9% 상승)으로 상승하였다.

3)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24% 감소

2012년 한국에서는 총 103만 톤 가량의 돼지고기가 소비되었는데, 그 중 국내산이 75만 톤으로 73%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2012년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7만7천 톤으로 2011년 37만 톤에 비해 25%나 줄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9년 20만9,000톤, 2010년 17만9,000톤, 2011년 37만 톤으로 구제역 사태 이후 급증하였다가 2012년엔 1/4이나 감소하였다. 지난 해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구제역 사태 이후 국내 돼지 사육규모가 회복되면서 출하물량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돼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에 수입량이 급감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년 수입량과 비교할 때, 무려 55%나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되었다.

<표 6> 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0		2011		2012(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4,314	-1.2	1,438,444	116.5	1,130,363	-21.4
1	미국	162,494	-11.8	461,296	183.9	350,787	-24.0
2	독일	13,288	-	106,486	701.4	133,157	25.1
3	캐나다	94,102	-5.5	208,867	122.0	132,222	-36.7
4	칠레	111,477	-7.0	116,363	4.4	124,660	7.1
5	네덜란드	44,663	10.5	74,058	65.8	58,374	-21.2
6	스페인	32,133	-5.1	73,298	128.1	57,052	-22.2
7	오스트리아	45,961	-4.0	79,409	72.8	51,088	-35.7
8	프랑스	46,518	7.8	63,146	35.7	47,866	-24.2
9	폴란드	10,425	3.8	40,920	292.5	46,955	14.8
10	벨기에	42,230	17.2	53,982	27.8	38,670	-28.4

자료: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산 11만1천 톤(40%) 3억5천만 달러(31%)였으며, 독일산 3만3천 톤(11.9%) 1억3천만 달러(11.5%), 칠레산 2만7천 톤(9.7%) 1억2천만 달러(10.6%), 캐나다 2만3천 톤(8.3%) 1억3천만 달러(11.5%) 순이었다.

10년 차에 관세가 폐지되는 냉장육(HS code 0203191000과 0203199000)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부위(냉동육)는 2013년 관세가 8.3~12%로 EU와 비교해 5.5% 낮으며,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13%나 더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냉동육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현재 국내 수입산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의 수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 수입 증가

2012년 국내 과일 소비량은 266만9천 톤에 달했으며, 그 중 29%에 해당하는 77만 4천 톤이 수입되었다. 한미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폭이 큰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의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미국산 오렌지 관세는 50%였으나,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0%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미국산 신선 오렌지 수입량(3.16～5.31)은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 달러(11만5천5백 톤)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증가했다.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 증가는 대체 효과가 있는 국내산 감귤뿐만 아니라 딸기, 참외, 토마토의 소비도 감소하게 만들었다.

미국산 체리는 무관세로 수입이 허용되어 수입량이 전년보다 90%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이 8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8% 증가했다. 미국산 신선 포도 수입도 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이 2600만 달러로 21.6% 늘었다.

미국산 체리의 수입 증가는 대체 효과가 있는 국내산 체리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참외의 소비도 감소하게 만들었다.

3. 위생 검역

1) 검역 주권의 후퇴 :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약속 못 지켜

2012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명

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2008년 5월 8일 신문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차례 의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2008년 9월 1일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2008년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약속을 확인하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고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한승수 총리에게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할 것임"이라는 확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민관현지조사단을 졸속으로 구성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발생 농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왔다.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논란이 되었다. 비정형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무증상 노령 소가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말초 신경(살코

기)에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비정형 L-형(BASE) 광우병은 일반적인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가 더 짧으며, 생존기간도 더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광우병 검사비율이 전체도축소의 0.1%에 불과하므로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미국의 사료규제 정책 역시 광우병 위험을 막기에 불충분하다. 소의 혈분과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이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소에게 돼지, 닭, 말 등의 사체에서 추출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의 2012년 4월 25일자 성명서에서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며 비판한 바 있다.

2)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가능성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2013년 2월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을 사용하여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NAFTA) 멕시코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수출증명(EV) 프로그램 하에 생산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도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졸속협상에 항의한 대만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의해 대만정부는 우설, 고환, 횡격막 등의 부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1월 28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광우병대책부회(食品衛生分科會伝達性海綿狀腦症對策部會)에서 광우병 대책 재평가(ＢＳＥ對策の再評価について)를 논의한 끝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기존의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 초에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과 견주어 볼 때 무려 7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이상까지도 전면적으로 개방한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원칙적으로 30개월 이상까지도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검역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 4대 선결조건, 한미FTA 미국 의

회 비준의 전제조건,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선물'이었는데,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촛불항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대만, 멕시코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의 수입조건 보다 형편없이 낮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선택할 현실적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식품안전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 증가

2013년 3월 현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세계 종자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784만 톤, 26억7천만 달러 어치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했다. 그 중 식용으로 옥수수 103만 톤, 대두 88만2천 톤을 수입하였으며, 사료용으로 578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7년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LMO 검역 현안과 섬유 양허안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바 있다. 앞으로 국내의 GMO/LMO 규제가 완화될수록 미국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의 선물'이라던 삼계탕 대미 수출, 여전히 미해결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2012년 말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5>)

<표 7> 한국의 삼계탕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6	68.8	12,601	-14
1	일본	12,237	79.4	10,480	-14.4
2	대만	1,665	21.2	1,201	-27.9
3	홍콩	483	55	581	20.4
4	싱가포르	59	34.3	160	173.2

5	호주	115	129.4	81	-29.6
6	말레이시아	2	-81.1	27	1,079.90
7	필리핀	26	47.1	22	-14.1
8	베트남	51	34.7	15	-69.5
9	마카오	6	-7.5	12	112.2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한국 정부는 2004년 4월 미국에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에야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측은 한국 내 삼계탕 작업장의 HACCP 관련 일부 기록 미흡과 작업장 일부 시설 및 장비 위생불량을 지적했으며, 그 사이 한국 내 조류독감(AI) 발생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2010년 11월 미국 정부의 2차 한국 현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만 3회에 걸쳐 한-미 전문가 화상회의 가 열렸다.

미국 정부는 2012년 11월 27일에야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13년 시행규칙개정최종안(Final Rule)이 결정되어야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 이후 한국의 가금육 생산업체가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아야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1999년부터 요청한 가금육 대미 수출 현안이 한미FTA 발효 1년 차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한미FTA 4대 선결조건과 미국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신속히 이루어진 것이야 말로 한미FTA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끝>